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24시간 비상대응체계의 빈틈없는 가동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지원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개최 -

금융위원회는 오늘(4월 13일) 오전 9시에 이덕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관련 휴전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범정부 비상경제본부(국무총리 주재) 산하 「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 內
①실물지원반, ②금융시장반, ③금융산업반으로 구성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 가동중
☞ [참조] “민생·실물경제와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3.30일 보도자료)”

이덕원 금융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후속협회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금융시장반에는 중동상황에 따른 시장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권·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4.9일까지 2.5조원 집행)은 지원규모 확대방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필요시 즉각 확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실물지원반에는 민생·실물경제 현장의 긴급한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최근 추경을 통해 지원규모가 확대(24.3조원→25.6조원)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집행(4.9일까지 3.6조원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권의 「53조원+α」 신규자금공급 등 지원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지원규모·대상 확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 ① 3월중 9.7조원+α 지원(신규자금 약 5조원 공급, 만기연장·상환유예 약 4.7조원)
- ② 배달기사 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주유폭화카드 추가 할인 혜택,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 등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주 개최하였던 ‘건설업-금융권 간담회’(4월 8일, 금융위원장·국토부장관 합동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7일 정유·석화업계 간담회 후속조치 사항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석유공사의 원활한 원유확보를 위해 U30억\$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확정 한 만큼 조속히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 (4.7일)정유·석화업계 간담회 (4.8일)건설업계 간담회 (4.10일)의료업계 간담회
- ** ①중동상황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 ②PF보증수수료 인하(주금공) ③공사비 상승 관련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주금공) 규모 확대 등

마지막으로 금융산업반에는 실물경제의 리스크 요인인 금융산업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수호하는 핵심”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대응의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사무관	김경호 (02-2100-2831)

